

중국경제 현안 브리핑

02-70호 / 12월 30일

중국의 都農 격차 확대요인과 대책

1. 중국의 都農 격차 확대 실태

- ☐ 중국경제가 연평균 7%의 높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도시와 농촌 소득의 격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음.
- 작년도 농촌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2,400元으로 도시주민 가처분소득의 1/3에 불과하였음.
- o 도농간 소득격차는 개혁개방 초기 다소 감소하였으나, 1983년 이후 다시 확대되기 시작함(<표 1> 참조).
- o 1995년도 ILO가 36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국은 도농 격차가 가장 큰 상위 3개국 중 하나였음.

<표 1> 도농간 소득격차 변화 추세

	도시와 농촌간 소득격차 비율
1978년	2.57 : 1
1983년	1.82 : 1
1990년	2.20 : 1
1995년	2.71 : 1
2001년	2.90 : 1

- ☐ 도시주민의 명목 소득증가 속도는 농민의 2배이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경우 1990년~2001년 도시주민의 가처분소득은 110% 증가했으나, 농민은 62% 증가에 그침. 현재 농민의 소득 수준은 90년대 초반의 도시주민 소득에 해당함.

- 도농간 1인당 소득격차는 1978~1985년 사이에는 매년 20~30元, 1985~1992년에는 100元, 1992년 이후에는 매년 300~400元씩 확대되었으며, 최근 2년 동안에는 연간 500元 정도 벌어졌음.

□ 더욱이 도시주민과는 달리 농민은 재생산을 위한 투자를 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격차는 통계상의 수치보다 크다고 할 수 있음.

- 작년도 농민의 1인당 지출액 2,780元 중 31%가 비생계성 소비지출이었던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도시주민의 경우 주택보조금, 가격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과 의료보험, 실업보험, 최저소득 보장 등 각종 사회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감안하면 도농간의 사회복지 수준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
- o 비공식 통계에 의하면 1994년도 도시주민이 누리는 사회복지비는 1인당 1,080元으로, 당해연도 농민소득의 83.4%에 해당함.
- o 세계은행은 1997년도 사회복지를 고려한 중국의 도농 격차가 4 : 1에 달한다고 추정한 바 있음.

□ 도시와 농촌간의 재산격차도 상당한데, 1996년의 경우 예금잔액을 비교하면 도시주민의 1인당 예금잔액은 8,831元으로, 농촌의 8.6배에 달하였음.

- 소비수준의 격차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999년에는 도시의 소비수준이 농촌의 3.5배에 달하였음.
- 내구소비재 보유면에서도 농촌은 도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표 3> 도시주민과 농민의 1인당 소비수준 변화 추세

	도시주민과 농민의 1인당소비 비율
1985년	2.31 : 1
1990년	2.95 : 1
1995년	3.40 : 1
1999년	3.51 : 1

<표 4> 도농간 내구소비재 보유량 비교

(1999년, 100가구 당 보유 수)

	도시	농촌
컬러 TV	120.5	54.5
냉장고	81	13.6
세탁기	92.2	29.9

2. 도농 격차 확대의 주요인

□ 도농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주된 원인은 중국정부의 경제성장정책이 도시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반면, 양자의 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종래의 정책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 도시 중심의 불균형발전전략은 도시의 산업을 신속하게 발전시켰으며, 도시의 각종 기초시설을 강화함으로써 도농간 격차를 확대함.
- 최근 들어 정부가 농촌 전력망을 개선하는 등 농촌지역의 인프라 건설에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아직 국가의 기초시설은 여전히 도시에 집중되어 있음.
- 도시와 농촌간 사회제도 특히 복지, 조세, 취업, 인구이동과 같은 제도적 차이는 도농간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임.
- 정부는 도시부문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농촌복지제도에 대해서는 대책이 거의 전무함.
- 교육정책의 경우에도 도시와 농촌 모두 9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농촌의 경우 실제 입학률이나 졸업률이 도시에 비해 크게 떨어짐.

- 농민은 도시지역에는 없는 民兵訓練費나 농촌 도로건설비를 별도로 부담해야 함. 또한 최근 농촌 세제개혁을 통해 상당수 잡부금 항목을 폐지하긴 했으나, 농업세를 인상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세 혜택은 거의 없음.

3. 도농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대책

□ 도농 격차의 확대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불리한 영향을 미침.

- 농촌소득의 증가율 둔화로 농촌 내수시장이 위축되고 있는바, 농촌의 상품판매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65.7%에서 1990년 53.1%, 2001년 37.4%로 하락함.
- 농촌지역의 인구 정체는 저급노동력의 과잉과 중간기술 노동인력의 부족을 유발하여 농촌산업의 구조조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도농 격차의 축소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발전전략과 함께 각종 제도적 개혁을 심화해야 함.

- 첫째, 정부는 재정지출 조정과 국채발행을 통해 수리시설과 생태환경 개선, 전력망 구축 등 농촌 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해야 함.
 - o 정부는 도로건설, 교육투자, 농산물 저장과 보존을 위한 시설 건설 등 기초시설이나 복지에 대한 투자를 점차 공공재정 영역으로 편입시켜야 함.
- 둘째, 국유기업 근로자 위주의 복지정책에서 벗어나 농업생산과 농민소득에 대한 지원정책을 증가시켜야 함.
 - o 이를 위해 WTO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농가소득 보조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해야 함. WTO는 농업총생산의 8.5%까지 보조금을 허용하지만, 현재 중국의 보조금 수준은 3.3%에 불과함.

- 셋째, 기존의 농촌 조세제도에 대한 정비와 개혁을 심화해야 함.
- o 농촌 세제개혁 시범지역을 확대하고, 자연재해 발생시 농업세와 농업특별
생산세를 감면해야 함.

- 넷째, 농촌노동력을 비농업부문으로 이전시켜 농가소득을 제고해야 함.
- o 도시는 농촌노동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지방정부는 농민에게 취업
정보, 기술훈련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농민의 도시 취업제한 정책이나 규
정을 수정하거나 폐지해야 함.(***)